

시민운동가의 정치 참여 경로와 평가

차명제(한일장신대학교)

I. 서론

4월 11일에 치러지는 제19대 총선은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선거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만큼 시민사회가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군부 독재 정권이 청산된 이후 지금까지 치러진 선거에 시민사회는 다양한 형태로 참여해 왔다. 그것은 대체로 공명선거, 유권자의 선거참여 독려, 각 정당 후보들에 대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검증과 후보에 대한 정보 공개, 정당과 후보의 공약 검증 등의 활동들이었다. 물론 1996년의 제15대 총선에서 시민사회 후보가 출마하기도 했고, 2000년 제16대 총선에 후보들에 대한 낙천·낙선 운동을 성공적으로 관철시켜 전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선거혁명”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제19대 선거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은 과거와 차원을 달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다수의 시민운동가들이 정치단체인 “내가 꿈꾸는 나라”를 결성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할 준비를 하였고 이 조직은 후에 “혁신과 통합”이라는 야권 통합을 위한 단체로 전환했고, 결국 야권후보 단일화를 이끌어 내는데 일조를 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존 정당에 합류하여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경로도 있고, 주로 환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추진해 왔던 녹색정당을 구성하여 현실정치에 참여하려는 시도도 있다. 이제까지 소수의 운동가들이 간헐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온 것과 달리 이번 선거에는 시민운동가들이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치참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 진영의 현실정치 참여 시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¹⁾

1) 물론 여기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매니페스토 운동이나 선거참여와 후보자 정보공개가 중심인 공명선거 운

첫째, 소극적 정치 참여: 2000년 16대 총선 이후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던 낙천/낙선 운동을 들 수 있다. 일종의 수동적인 정치참여로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자질검증을 통해 한국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후보를 탈락시키는 형태의 선거운동으로 한국 시민사회의 가장 흔한 정치참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선거에 이 운동방식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 된다.

둘째, 무임승차형 정치참여: 시민운동가들이 기존 정당에 소위 영입되는 형태의 정치참여 방식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과거에는 특히 진보성향의 정당에 영입되거나 입당하여 시민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역구에 출마하여 유권자들로부터 직접 선택 받는 것이고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진입하였다.

셋째, 거버넌스형 정치참여: 이번 19대 총선의 두드러진 특징은 시민운동진영에서 정치참여를 위한 연대체를 형성하여 야권통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정치 참여를 모색한 점이다. 이를 통해 소위 386(현재에는 486)세대라 할 수 있는 시민운동권의 고참 활동가들이 대거 운동단체를 떠나 정치권에 진입하였다.

넷째, 시민운동형 정치참여: 본격적인 녹색정치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출범했다. 그 성공여부는 불확실하나 녹색당이 창당되어 시민운동 진영이 기존 정당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정치에 진출하려 한다.²⁾

이상의 네 가지 유형이 시민운동진영의 현실정치 참여의 경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거버넌스형과 시민운동 형은 이번 총선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두드러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한국 시민운동의 정치 참여 유형에 대한 분석에 앞서 한국 시민운동의 강한 정치성의 원인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동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2) 네 가지 정치참여 유형과 관련한 용어 선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 개념은 전혀 공식적인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다만 필자가 현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구상한 개념임을 밝히면서 향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

II. 한국 시민운동의 강한 정치적 성향³⁾

한국의 시민운동은 태생적으로 정치 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운동의 정치참여는 필연적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7년 6월 민주 항쟁에 의해 군부독재정치체제가 종식되고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정권교체가 이뤄질 수 있었고, 1989년 경제정의 시민연합을 필두로 다수의 시민운동단체들이 출범했다. 정당들도 새롭게 만들어졌으나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달리 개혁은 매우 더딘 속도로 진행된 반면 시민단체들은 즉각적으로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응하는 정치와 사회 개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했다. 정당과 달리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정치와 사회개혁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을 추구한 것은 설립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구성원들의 정치 성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으며, 대부분의 시민단체 구성원들은 7, 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학생 운동 출신이었다. 더군다나 이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의 시민운동이나 학생운동과 달리 성공한 운동을 경험한 세대이고 또한 일반 시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었다. 당시 시민들은 부패하고 무능한 구체제 정치인들이 아직 건재한 정당 대신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한 시민단체들을 통해 그들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시민단체들도 다양한 개혁적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준정당의 역할을 자임하고 공론을 형성하여 정치권에 대해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의 위상을 확보해 나갔다.

그리고 이 단체들은 활동가 외에도 각종 위원회와 다양한 형태의 외곽 조직들을 구성하여 외부 전문가들이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 자문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대개 학자와 교수, 민간과 정부 연구기관의 연구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들을 제시할 수 있었고 이는 행정부나 정당의 그것에 비해 더 큰 대중적 지지를 얻기도 했다.⁴⁾

3) 필자는 시민운동을 한국 사회운동의 한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시민운동은 노동자 운동이나 농민운동과 다르며, 민주화 운동과 반체제 운동과도 구별된다. 그리고 서구의 신사회운동과도 차이가 있다. 이 글의 주제가 한국 시민운동의 정치 참여이기 때문에 한국 시민운동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1989년 경실련 창설 이후 한국 사회의 주도적인 시민사회 운동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학생운동, 노동자운동, 빈민운동, 민주화 운동 등 1987년 이전의 사회 운동과 구별된다. 환경, 여성, 소수자, 인권, 문화 영역 등 사회의 각 영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운동이 모두 이 시민운동의 범주에 속하고, 그런 의미에서 서구의 신사회운동과 유사하지만, 강력한 수직적 조직, 카리스마적 지도자, 강한 개혁적 정치 지향성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신사회운동과도 구분된다. 그러므로 필자가 주장하는 시민운동은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전개된 시민단체(NGO) 중심의 사회개혁 운동을 의미한다.

4) 1993년 정부의 금융개혁과 관련하여 경실련의 금융실명제의 도입이 그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몇몇 시민운동단체들 중심의 운동이 시민운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 사회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이 시민운동은 독자적으로, 때론 시민운동단체의 연대운동으로, 그리고 다른 사회단체들과의 연합운동으로 확장되었고, 사회적 영향력도 그에 따라 확대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러한 운동들을 호의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보도한 대중언론매체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한국 시민운동의 운동방식은 서구의 신사회 운동이나 NGO/NPO의 사업방식과 매우 상이하였다. 우선 시민운동의 영역과 주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지향점에 있어 정치 개혁의 성격이 매우 강했으며, 연대 중심의 운동방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조직 구조도 과거 학생운동의 전위대적 전통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 운동 조직 내부의 이념적 결속력도 긴밀하고 조직 내의 다양성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정당을 포함한 특정 정치 집단과의 연대와 정책 연합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network가 형성되었다. 이 와중에서 기존 정치집단들은 국민들로부터의 정당성 확보를 통한 지지를 얻기 위해, 또는 전문가들의 확보를 위해 시민운동단체에 참여한 전문가나 전문 운동가들을 영입하기도 했다.

한국의 시민운동단체는 그 고유의 운동방식과 조직 운영의 특성상 기존 정당을 포함한 기존 정치집단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대단히 넓다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 참여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에게 있어 시민운동단체는 일종의 통로가 되기도 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각종 선거에 참여한 후보들이 시민운동단체의 경력을 주요 이력으로 소개한 경우를 보면 이러한 맥락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Ⅲ. 시민운동가들의 정치 참여 유형

시민운동가들의 정치참여는 김영삼 정권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초기에는 시민운동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 중심이었으나 점차 현장 활동가와 이선으로 물러난 운동가들까지로 확대되었으며, 정치참여 분야도 입법과 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입법 분야에서는 정당이나 정당 산하 기관, 혹은 국회 산하 기관까지 확산되었고, 행정부에서는 청와대를 포함한 부처 산하 기관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정부산하 기관이나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임 시민운동가들을 정치에 참여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으나 이들 중 일부가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정치참여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1. 소극적 정치 참여

가장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정치 참여 유형이다. 이 유형은 시민운동단체가 가장 오래전부터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19대 총선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시민단체에서 이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의 강도는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운동도 삼단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1단계: 공명선거 운동

2000년 이전까지 시민운동단체의 보편적 정치참여 운동 방식이었다. 운동의 내용은 주로 선거참여, 후보정보 공개, 정당의 정책 평가 등이었다.

제2단계: 낙선낙천 운동

2000년 이후 낙천낙선운동은 시민단체의 주된 정치참여 운동이었다. 이 운동방식의 특징은 제 1단계 운동에서의 운동단체의 정치와 시민사회의 소극적인 중개자에서 정치의 적극적 소비자로의 변신을 꾀했다는 점이다. 소비자(유권자,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선거에 참여 하지 못하도록 방해 내지 저지하는 운동이었다. 낙천자와 낙선자 명단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고 이들을 선택하지 말도록 유도하는 운동이었다. 그러나 이 방식에 대한 기존 정치집단의 반발과 저항도 거세어 그 결과 이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운동가들이 커다란 상처를 입기도 했다. 이러한 운동은 점차 진화하여 시민운동진영이 원하는 정치후보들을 선택하도록 명단을 제시한다거나, 운동 영역 별로 추천하는 정치인들의 명단을 발표하는 등 방법을 달리 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운동가들이 자신들과 우호적인 정치인의 선거를 돕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 소속 정당에서 일을 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들은 운동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도 하지만 활동의 장을 시민사회 영역에서 정치로 완전히 전환했다.

제3단계: 매니페스토 운동

제17대 총선 때부터 추진되던 운동 유형이다. 이 운동은 기존 시민단체운동과는 달리

일부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매니페스토 운동본부를 조직하여 후보와 정당의 선거 공약을 검증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에는 대체로 서울보다는 지방의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참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소극적 정치참여 유형의 시민운동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보았으나 이 중 아직 유효한 운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 이유는 이 운동이 유권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가, 혹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주체의 역량은 충분한가 하는 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 참여 유형은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느 정도 견지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운동의 전형에 가까운 정치참여 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2. 무임승차형 정치 참여

이 유형은 시민운동가들이 정당이나 정치 집단에 의해 포섭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 집단들이 운동단체와 정책연대를 통해 시민운동 전문가들을 그들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경우가 흔히 있다. 선택 대상인 전문가나 활동가들이 정치참여를 홀로 결정하고 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단체를 떠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사전 준비 없이 해당 분야의 주요 활동가와 전문가가 떠날 경우 인수인계는 물론이고 단체 사업 자체가 중단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단체는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또한 활동가나 전문가들은 그리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정치가로의 변신이 가능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역구에 출마하여 선거를 치루는 대신 비례대표로 진입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와의 직접 접촉, 지역구(현장) 활동, 조직 운영, 특정 계파에의 소속, 정당에 대한 충성심 등 정치인으로서의 지난한 통과 의례 없이 정치에 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무임승차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이렇게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들로 인해 시민운동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내지 도덕성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생겨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시민사회의 다양성과 정치인으로 입문하는 다양한 경로를 감안하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고, 동시에 권위적이고 경직된 정당과 한국 정치 풍토에 시민사회적 가치를 이식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안하면 그리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와 권력 쟁취와 개인의 이해에 집착하는 정치사회의 가치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고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정치인의 충원 방식과 시민운동가의 충원 방식이 엄연히 다르며, 운동방식과 목적이

다르다. 이런 무임승차형 정치참여는 정당이 안정화되고 한국 정치가 보다 성숙해질 수 있다면 그리 문제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도 정치인을 배출하는 주요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시민운동가로서는 이러한 정치권으로의 진입은 일종의 로또에 당첨된 상황과 유사하다. 이러한 진입을 통해 갑자기 권력과 함께 사회적 신분의 수직상승, 거기에 경제적 안정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양가감정을 갖게 되지 않을 수 없으며, 바로 그런 이유로 이런 방식으로 시민운동을 떠난 운동가들은 과거 몸담고 있던 단체와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다. 함께 활동하던 운동가들 역시 이들에 대해 양가감정을 갖게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유형의 정치참여는 한국의 정치가 선진화되기 전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치권이 정당성 확보와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 이들을 영입하지만 그 효과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참여했던 운동가 모두에게 부정적인 흔적을 남길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한국의 정치와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이런 식의 정치 참여는 지양되어야겠다.

3. 거버넌스형 정치 참여

19대 총선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시민운동의 정치 참여 유형이다. 시민운동가 중 이선으로 물러난 이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적인 정치 참여를 준비하면서 “내가 꿈꾸는 나라”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처음부터 기존 진보 성향의 정당과 연대하여 야권통합을 건인하고 더 나아가 정권교체를 실현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시민사회의 이러한 집단 행동은 이명박정권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기존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대신 보수 성향의 운동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정부와 시민단체의 거버넌스 구조를 완전히 무력화 시켰다. 동시에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금도 대부분 이들 보수단체에 집중됨으로 인해 기존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들 단체들은 이명박 정권과 사활을 건 생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녹색성장이라는 미명하의 문제투성이 4대강 사업과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기존 시민운동단체의 운동방향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었다.

대개 486 세대 중심의 이 운동가들은 특히 시민운동의 원로인 박원순 전 희망제작소 이사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운동의 파급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 운동에 대거 참여하여 현실정치

를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는 다시 현실정치의 진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했을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 공천이 마감된 상황에서 이 운동을 평가해 본다면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4·11 총선 결과를 보면 이 참여 형태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해 시민운동가들은 시민운동과 정치가로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 절실하게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개인의 입신출세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표를 구하는 행위와 공공선을 위해 대중과 시민들을 설득하는 행동은 엄연히 구별될 것이다. 지역구에서 2명 정도, 비례로 3명가량의 시민운동가들이 출마했으며, 그 외의 몇몇은 해당 정당의 당직자로 근무하게 될 것 같다.⁵⁾

다만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렇게 정치참여를 시도했던 운동가들의 행보이다.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경험과 지식이 매우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시민사회가 재충전과 재생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나 아직 한국의 시민사회는 그럴 수 있는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시민운동 단체가 받아 줄 수 있는 여유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닌 것 같다. 그러므로 이들은 정치에 진출한 이들끼리 상호부조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관심은 이러한 시민운동가들의 정치 참여가 한국의 시민사회와 정치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 일 것이다. 제16대 총선에서 시민사회가 낙천낙선 운동을 전개하면서 기존 정치인의 절반을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 발전에 그다지 기여한 것 같지 않다. 소위 선거혁명을 통해서도 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는데, 과연 이들이 고질적인 한국의 정당구조와 정치 풍토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이들에게 이런 요구나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은 시민 주도 정치의 실현을 위해 정치참여를 감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시민 주도 정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직 뚜렷하게 정의된 바 없다. 다만 이들의 참여로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피와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겠지만 시민운동 진영은 거의 초토화된 것 같은 분위기이다. 물론 이러한 분위기는 기존 진보 성향의 시민운동단체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다. 어쨌든 시민운동의 지지자와 후원자들은 이러한 운동가들의 행보에 대해 적지

5) 남윤인순, 김기식, 김재남 등이 비례대표로, 이용선, 이학영 등이 지역구로 출마하게 된다. 그 외의 다른 운동가들은 지역 경선에서 낙마하거나 경선 후보조차 되지 못했다. 시민운동가 출신으로는 기존 진보성향의 단체와 함께 지방의제에서도 정치 참여를 시도했으나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되지 않았다. 이 과정만 살펴봐도 시민운동의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최대 성공 사례인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도 안철수 바람 없이 가능했는지 제고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않은 거부감과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단체의 실무 책임자들이 대거 정치권으로의 진입을 도모한다면 그 단체의 분위기는 어떨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기존 활동가들은 그들의 직업적 전망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이다.

이런 거버넌스형 참여방식의 문제점과 폐해는 정당정치의 다양성을 저지한다는 점일 것이다. 한국 사회도 이제 고도로 선진화되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도 다양해지고 그들의 사고와 생활 방식도 이질적이 되었다. 그런데 기존의 정치는, 이러한 연대는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애초부터 봉쇄하고 있다. 물론 정권교체의 필요성은 얼마든지 있겠지만 선거는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가 거의 완벽하게 보장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거기에 매 4년, 혹은 5년마다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정치 형태는 오히려 유권자와 시민들에게 정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여야의 두 개의 선택지만 제공되는 것이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정치 발전을 방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두 정당 외에도 다양한 주의주장을 하는 정당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만 서로가 경쟁하고 공정한 룰이 생기고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4. 시민운동형 정치 참여

이 유형의 정치참여도 제19대 총선의 매우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이다. 환경진영과 지역 풀뿌리 운동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난 20여 년 동안 추진해 오던 녹색당이 드디어 창당되었다. 두어 달 사이에 5개 광역지자체에서 각 1000명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하여 지난 3월 4일에 창당하였다. 현재 약 7천여 명의 당비를 내는 당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당원 수는 이미 의회에 진입해 있는 통합진보당 당원 수에 육박하고 있다. 물론 시민운동형 정치 참여는 녹색당으로만 표출되지는 않지만 녹색당이 지구 차원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정당이 출현했다. 그리고 시민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을 기반으로 구성된 정당은 녹색당이 거의 유일하고 지난 1980년대 창당된 이래 아직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면서 존재하고 있는 정당은 녹색당이 유일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도 1990년대 초반부터 녹색당 창당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한때는 시민운동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한때는 준비가 너무 부족해서, 한때는 사회적 기반과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해 번번이 실패했다. 이제 19대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창당할 수 있었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첫째는 현 정치의 실패와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이 유권자와 시민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졌고, 따라서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는 층이 그만큼 확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의 확산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지구를 뒤흔들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게다가 각종 질병과 식량문제(보전과 안전성 문제), 전염병 창궐, 에너지 문제와 원자력 발전소 등이 일반 시민들의 관심사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장 주요 이슈로 다루는 녹색당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대안적 삶의 양식에 대한 관심이다. 자원의 착취를 통해 대량 소비가 가능한 삶과 무한 경쟁 사회에 대한 회의가 바로 이러한 대안적 삶을 추구하게 하고 이들이 녹색당을 지지하게 된 것이다. 끝으로 간과해서 안될 부분이 바로 교육과 학습효과라 할 수 있다. 녹색평론을 구독하는 열혈 독자들이 대거 녹색당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재 SNS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유사한 형태로 녹색당이 출범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녹색당은 그 존재 방식이 기존 정당과 크게 구별된다. 이 정당은 “정당 아닌 정당”, “(신)사회운동 정당”으로 불리운다. 이 정당은 의회에 진입해서도 정치운동을 통해 기존 정당과 현실 정치의 변화,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의 시민사회화에 가장 적합한 정당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의회에 진입한 여타의 녹색당들은 이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한국 녹색당은 적어도 비례대표 1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3% 지지를 얻는 것이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정당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선거법상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 출범했던 “녹색평화당”이 큰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2% 이상의 유권자 지지를 얻었던 상황을 유추해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7천명 이상의 진성 당원을 확보하고 있는 녹색당으로서는 의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녹색당은 그 이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녹색당은 마치 1987년의 6월 항쟁과 같이 녹색정치의 실현을 위해 이념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집단들을 이념적으로 분류해 보면 첫째는 환경운동을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 출신을 들 수 있다. 시민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이념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는 좌파성향의 환경주의자들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기존 좌파 정당에서 환경이 경시되고 여전히 노동자 중심의 이념 노선에 추종하는 데 반발하여 녹색당에 참여한

이들이다. 이들은 녹색당 보다 “녹색 사회당”(?)을 선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부류는 생태주의, 대안공동체, 지역 풀뿌리 자치를 표방하는 집단들이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생태주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의 경우처럼 근본주의자와 현실주의자 사이의 갈등이 한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은 한국의 정당과 정치를 개혁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당은 기존 정당 논리와 구조가 통하지 않는 매우 자유로우면서도 대안적인 형태로 정당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다. 특정 유력인사 중심이 아닌 지역과 당비를 납부하는 일반 당원 중심의 정당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은 매우 더디겠지만 참여민주주의, 숙의(심의)민주주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정당이며, 따라서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미에서 녹색당은 시민운동가들의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참여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정당과 달리 이 녹색당에 참여한 시민운동가들은 상황에 따라 아무런 장벽 없이 시민단체로의 복귀가 가능할 것이다. 정치적 이질감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서구의 경우 신사회운동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을 때 녹색당이 출범했는데, 한국에서는 시민운동의 불씨가 거의 꺼져갈 때 이런 시민운동 정당이 조직되어 유권자들로부터 어떤 형태의 지지를 얻을지 두고 볼 일이다.

IV. 맺는 말

2012년 시민운동의 가장 큰 변화는 지금까지 시민운동이 금기시해 왔던 정치 참여의 족쇄가 해체된 것이다. 시민운동단체에서는 정치 참여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시민운동의 정치 참여는 엄밀한 의미에서 시민운동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시민단체가 특정 정파의 가치와 주장만을 수용한다면 이미 시민운동단체가 아닌 그 정파의 전위대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야권통합에 시민단체가 적극 참여한다면 이는 여권과의 관계 악화를 의미하게 되며, 동시에 여권을 지지하는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야권 통합에 대거 참여한 운동가들을 배출한 단체를 여권 지지자들이 신뢰할 리 만무하다.

이러한 상황은 시민운동단체가 아무리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시민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 과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기존 시민운

동단체의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필자가 예측하기로는 진보성향의 기존 시민단체들은 그 사회적 영향력을 급속히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이 대거 정치권으로 진입함으로 인해 조직적 역량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정부와의 거버넌스는 전보다 강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최근 수차례에 걸친 특임장관실과 시민단체 사이의 몇 차례의 모임을 통해 대화 채널이 복원되는가 하면 리우+20과 관련하여 정부가 NGO들을 지원하고, 또한 민간단체 지원기금을 150억 원으로 증액한 것은 정부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의 거버넌스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결론적으로 시민운동가들의 정치참여가 한국적 상황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 사회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둘째, 한국 정치 개혁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시민사회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 시민운동가들이 기존 정치인들과 여타 다른 영역에서 충원되는 정치인들에 비해 현저히 월등한 경쟁력을 갖는다면 당연히 이들의 정치 참여는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인으로서의 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다. 물론 정치인들도 학습과 훈련 과정이 생략되었기는 마찬가지지만 이들 정치인들은 보다 폭 넓은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 시민운동가들과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검증된 시민운동가 출신의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체계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정치 개혁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여 형식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거버넌스나 무임승차형의 정치 참여로는 정치개혁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들이 기존 정치 구조에 통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기존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임 법칙에 순응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승산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운동가 출신들은 생존을 위해 정치 개혁에 대한 열정도, 의지도 소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법칙이 강제되지 않는, 이런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게임법칙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시민운동적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미 서구에서 녹색당의 등장이 기존 정당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정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긍정적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시민운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여론 형성의 주체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동시에 지속적인 세대교체가 실현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 내에서의 재생산 구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시민운동가들의 정치참여가 공식화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정치와 시민사회 사이의 견제와 협력에 기초한 선한 거버넌스가 구조화 된다면 한국의 시민사회는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론화는 쉽지 않을 것이며, 역시 시민운동의 비정과정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진화한다.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한 시민운동단체는 결국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민운동단체가 다양한 모습으로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운동가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논의는 어찌 보면 무의미하다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운동가들의 정치참여는 그 이유가 어찌 되었건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그 참여 형태도 매우 다양해질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형 정치참여도 현재 서구에서는 그리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미 녹색당은 운동 정당이 아닌 기득권을 향유하는 정상적인 정당이 된 반면 사회운동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해적당”이 출현하여 비교적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현상을 보면 너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실시된 독일의 한 주 선거에서 녹색당이 5.1%의 지지를 얻은 반면 22세의 여성이 이끄는 “해적당”은 7.4%의 지지를 얻었다. 이 주 선거에 처음 참여한 해적당이 녹색당 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시민운동가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할 수는 있겠지만, 시민들이 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박봉을 받고 일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있겠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일반 시민들이 그들에게 그 어떤 혜택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비판하기에 앞서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한국 정치의 후진성은 그들의 책임이 결코 아니며, 이를 개혁할 의무가 오로지 그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시민사회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각자에게 맡겨진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발전은 첫째도 둘째도 민주주의의 공고화이며, 이는 강한 시민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